

노정교섭 추진 민주노총-충남도 간담회 열어

9월 14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본부장 유희종)와 충청남도(도지사 박수현)가 노정교섭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세종충남본부장, 금속노조 충남지부장 및 현대자동차아산위원회 사무장을 포함한 9개 산별조직 대표자들과 도지사를 포함한 산업·노동정책 행정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역의 주요한 노동의제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노정교섭 추진은 정부의 산업정책·노동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점검하는 논의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주노총과 충청남도가 처음으로 노정교섭을 추진하는 만큼, 안정적인 논의틀을 만든 후 의제를 세분화, 구체화하는 수순을 밟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본부는 산별조직의 교섭형식과 의제를 조정, 정리하고, 동시에 충청남도 주무부서와 산별조직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후 노조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노정교섭과 노조 산별조직과 도 실국별 실무협의를 병행하게 됩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충청남도에 첫 번째 노정교섭 의제로 아래 3가지를 전달했습니다.

충남집단교섭 노사-충남도 협의체 구성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충남지역관계사용자(이하 노사)는 9월 3일 2026년 지부집단교섭에서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사공동 대지자체 요구>를 합의하였습니다. 핵심내용은 노사가 공동으로 충청남도에 △지부집단교섭 합의 효력 확장 △지부집단교섭 참가사업장 우선적 인센티브 제공 △도 정책수립에 노사 참여 보장 △이를 위한 노사정 협의 구조 마련 등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위 요구는 충남지부집단교섭에 참가하는(이하 참가사업장) 15개 회사, 16개 지회(조합원 4천여명)에게 우선 해당됩니다.

지부는 올해 10월에 우선 참가사업장 지회 대표자회의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요구안을 세부적으로 다듬을 것입니다. 또한 충남 노사가 함께 지방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고 노사 공동의 의제를 추려낼 것입니다. 지부집단교섭 조인식 이후 노사가 합의한 요구안을 충청남도에 전달하고 충청남도 담당부서와 노사정 협의 구조 마련을 위한 구체적 논의에 착수합니다. 노사와 충청남도가 함께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충남산별협약을 지역에 확장시키고 지부집단교섭 참가사업장 확대에 힘씁니다.

자동차부품업종: 구조적 한계 기업 지원방안

충남지역은 완성차에 납품하는 많은 중소영세 자동차부품사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규모는 작지만 오랜 역사와 경험으로 통해 기술력과 숙련도가 검증된 사업장들입니다. 하지만 몇 년 사이 친환경 정책에 따른 산업전환과 완성차가 강요하는 원가절감·납품단가 인하·글로벌 관세비용 전가 등의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있습니다. 이런 위기는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노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동차부품 업종에 대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합니다. 친환경 정책에 따른 구조조정과 노동조건 후퇴 등이 예상되는 내연기관차 부품 사업장과 CR 등 완성차 정책에 따른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부실기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이 시급합니다. 충남지부는 노사와 충청남도가 자동차부품사 현장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진행을 시작으로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에 대한 대책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하자고 요구합니다.



철강업종: 산업·고용위기 대응 지원방안

국내 철강산업은 세계 경기 부진, 탄소중립 등 환경규제, 중국 저가제품 공세와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철강사업장이 집중 포진한 당진지역은 올해 정부로 부터 산업위기·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진 제조업 생산액중 60%가 철강산업에서 나오며, 당진 제조업 노동자 40%가 철강산업에서 일합니다.

철강업종 고용위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어떤 지원과 보상을 받는지, 회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철강산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탄소중립법, K-스틸법은 당사자인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충남지부는 철강업종 노사와 충청남도가 정보공유부터 실태파악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산업육성과 노동자 고용안정 등의 의제에 대한 협의체를 만들자고 요구합니다. 동향